

학동·화정동 붕괴사고, 경찰 수사 너무 더디다

'학동 참사' 8개월...조합장 비리·원청업체 결재라인 등 쟁점 산적 현대산업개발 상무 영장 신청...광주경찰 인력 부족에 팀장 구속도 '화정동 참사' 수사 속도도 기대 못 미쳐...신속·엄정한 수사 나서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6명의 인명피해로 이어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국민 기대와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8개월이 넘도록 여태껏 해결하지 못한 수사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난달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피해자 수습이 마무리됐지만 장기화가 불가피한 붕괴원인 규명을 제외하더라도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선 경찰서의 부족한 수사인력 때문에 광주경찰청이 주요 사건 수사를 도맡아 시피하는 상황도 수사를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광주경찰청 특정 부서 팀장이 다른 사건에 연루, 검찰에 구속된 뒤 해당 부서에 대한 수사 공정·신뢰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점도 수사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로 꼽힌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상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해 현대산업개발 임원 A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상무는 일반건축물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최종 철거 업체로 선정된 하도급업체측에 구체적인 입찰 가액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사고와 관련된 입찰 비리 혐의를 잡아 원청기업 관계자에 대한 신병 처리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조합장 비리 의혹 ▲재개발 정비업체측 비리 의혹 ▲현대산업개발 결재라인의 묵인 의혹 등 수사는 본격적으로 파고 들지도 못한 상태다.

6명의 사상자를 낸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속도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온다.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경우 제기된 부실시공, 재하도급 과정에서의 불법성 등에 대한 원청기업의 묵인 혐의 등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건 모두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맡고 있는 실정이지만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특수성, 수사 인력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수사 장기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국정감사 자

료 보면 광주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7월까지 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50.8일이 걸렸다. 4년 전인 2017년(37.4일)에 견주 열흘 이상 늦어졌다. 반면, 수사경과를 보유한 경찰은 지난 2020년 1102명에서 지난해 1038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은 쌓이는데 복잡한 사건을 수사할 인력은 줄어들다보니 이른바 지방청으로만 주요 사건이 몰리는 형국이다.

광주경찰청의 특수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광주경찰청의 반부패수사대 모 팀장은 학동 참사를 수사하던 중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팀장의 부재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뿐 아니라 관련 경찰 수사의 공정·신뢰성에도 의혹이 시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당장, 해당 팀장 등의 수사를 거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법정에서 담당

경찰의 구속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이같은 시선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대형 참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과 처벌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우식 참여자치21사무국장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던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화정동 붕괴사고도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려된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수사 과정에서 조사할 사건 관련자들과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강력한 의지를 갖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면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선거 공보물 발송작업 분주

21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 및 봉사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인터넷 게임방송 불법 환전 통로로

"BJ가 대가 받고 환전상 홍보"

인터넷 게임 방송이 게임머니 불법 환전의 통로 역할을 하는 홍보장으로 이용되면서 게임 문화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 방송 채팅창을 통해 게임머니 불법으로 환전해주는 광고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게임방송 비디오자키(BJ)들은 게임 환전상에게 대가를 받고 환전상을 홍보하는 등 불법 환전을 부추기는 경우도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머니 환전상 A(36)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2억2400여만원의 추징했다.

A씨가 고용한 직원 B(36)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31일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하는 BJ들이 운영하는 게임 채널 채팅창에 게임머니 환전 고객들을 겨냥해 대포폰 번호를 올린 뒤 문의해오는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258회에 걸쳐 2억 58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특히 이들에 대한 선고 과정에서 다수의 인터넷 게임방송BJ들이 게임머니 환전상에게 대가를 받고 게임 방송을 하면서 환전상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와 함께 기소된 BJ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인터넷 게임방송이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불법 환전을 알선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의 도박 행위를 방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대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 상담사는 "광주·전남 20·29세 성인 도박문제 참여 비율이 매년 증가세"라며 "인터넷 방송이 20·30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활용한 불법 온라인 도박이나 불법 환전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이스피싱에 속은 아내 돈 되찾으려다...

"통장 구해보면 돈 돌려준다" 에 다른 사람 계좌 넘기며 범행 가담 추가 합의...2심서 집유로 풀려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수백만원을 잃은 부인의 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를 넘겨주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던 30대 남편이 구속됐다. 항소심에서야 풀려났다. 사기당한 돈을 되찾을 생각에 시작했던 일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로 이어지면서 돈을 되찾기는커녕, 구속된 뒤 피

해자들에게 합의금까지 주고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줄 예상하고도, 자신의 돈을 되찾기 위해 은행 계좌를 넘겨준 만큼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A(28)씨는 지난해 2월 6일 전문 통장 공급 업체에서 받은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전달했다. 한 달 전쯤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A씨 부인이 잃어버린 700만원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던 중 '통장을 구해보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계좌를 이용해 다른 피해

자 2명에게 4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1심에서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사기피해를 당한 부인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계좌를 전달한 것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줄 몰라 가담했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계좌를 제공,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합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선후보 현수막 훼손 범인은 '바람'

긴장했던 서부경찰 허탈

대선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범인(?)은 '바람'이었다.

경찰은 20대 대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대선 후보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바짝 긴장했지만 바람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허탈한 반응을 보였다.

2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 내걸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찢겨져 나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급히 현장

으로 출동, 후보 현수막 모서리가 찢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우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현수막이 지난 20일 정오께 훼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인근 건물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영상을 꼼꼼히 뒤지다 현수막이 훼손되는 장면을 확인했다. 강한 바람에 현수막 모서리에 달린 줄이 끊어지면서 현수막이 찢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날 광주에는 최고 초속 7.8m의 강한 바람이 불었던 사실도 확인, 내사 종결했다.

양홍렬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선거 후보자의 벽보 혹은 현수막이 강풍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